

# 논란 또 논란...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밀실 쪽지투표'

### 광주시의원들, 투표 사실 숨기고 '합의 추대' 공표 담합 의혹 광주시당, 진상조사 착수...예결위 위원 선임 과정부터 조사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시의원 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7월 23일자 광주일보 5면)에 일명 '밀실 쪽지 투표'가 진행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쪽지 투표'를 진행하고자 의회관리 투표 사실을 감추기로 입을 맞추는 등 투병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은 이날 예결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전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의회사무국 예결위 담당자들과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 시의원,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수훈(서구 1선거구)·김나운(북구 6선거구)·박미정(동구 2선거구)·이귀순(광산구 4선거구)·정다은(북구 2선거구)·정무창(광산구 2선거구)·채은지(비례) 의원 등 9명의 예결위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과 민주당 박미정 시의원이 위원장에 입후보했다.

예결위 사무 담당자들은 즉시 다수 후보가 입후보할 경우를 대비해 투표용지를 만들어 갔지만, 위원들은 속의 과정을 거쳐보겠다고 사무 담당자들을 모두 내보냈다.

이후 30-40분간의 위원들만의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무 담당자들을 내보내고 자체적으로 일명 '쪽지 투표'를 진행했다. 사무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한 투표용지를 사용할 경우 기록에 남을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쪽지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쪽지 투표를 진행한 뒤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투표 사실을 숨기고 '합의 추대'를 했다고 공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미정 시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명의 예결위원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무소속 의원의 위원장 선출은 일부 의원들이 미리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투표와 개표는 모두 정무창 의원이 혼자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무소속 심창욱 의원이 선출됐다는 것만 발표해 입후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몇 표 받았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이 무소속 심 의원에 대해 몇 표를 줬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이를 의원들끼리 완전히 '보안'을 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해당(黨黨) 행위'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초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온 부분부터 모두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혁신당 광주시당(혁신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헛발질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 김용임 시의원의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 비판했다.

혁신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을 옹호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조력을 제정하려다 철회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전체 23석 중 21석의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광주시민 세금을 심사 조정하는 핵심 자리에 국회 소속 의원을 선임한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오판을 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박용수(왼쪽 앞)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사람 중심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세계 공유

### 유엔 인권회의서 소개

유엔 인권회의에서 광주시의 통합돌봄 시스템이 주목받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 광주시 대표단을 파견, 인권도시의 정책 경험을 세계 지방정부-국제기구와 공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공동 주최한 이번 국제인권회의는 '인권을 위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는 세계 20개 도시의 지방정부 대표, 국제인권기구 관계자, 인권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인권정책과 공동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신경구 인권국제교

류자문관 등 4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대표단은 12·3 비상계엄과 광주시 대응,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민주·인권·평화도시의 비전 등을 소개했다.

박용수 인권평화국장은 발표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수호뿐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권리를 지키는 인권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정신은 오늘날 인권 증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소개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유엔 사회권 규약의 가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한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정책의 포용성과 현장 적용성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민주당 독점체제 장기화...견제·균형 실종"

### 참여자치21 지방자치 의정혁신 1차 토론회...독점 구조 완화 강조

광주·전남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독점체제 장기화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지역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지방자치 리부팅'이라는 주제로 의정혁신 1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치 21이 주최하고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의 의정혁신단이 주관했다.

조진상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지방자치 34년

-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초발제에서 호남의 민주당 1당 독점구조의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의원 비율은 90%가 넘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이 집행부와 같은 정당으로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면서 "호남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광역·기초 지자체 선거는 정해진 것으로 보고 무관심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장은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호남을 비교하면서 정당간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바이에른 주와 호남은 남쪽의 곡창지역으로 30년 전 가장 못사는 지역이었다"면서 "하

지만, 바이에른 주는 2000년 중앙정치에서부터 일당 독주체제가 무너져 현재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성장했지만, 호남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조 의장은 광주-순천간 경전선 철도 건설을 예로 들었다. 과거 민주당은 누구도 경전선에 관심이 없었지만, 2017년 국민의당의 노력으로 3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지역정당 설립요건과 주민소환제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광역의원들의 비위행위 사례와 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소비쿠폰 색깔별 카드 지급...광주시, 논란 공식 사과

### 정부 "인원 감수성 부족" 시정지시

광주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금액별 카드색을 달리한 점을 공식 사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정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소비쿠폰을 금액에 따라 3종류(분홍색·18만

원, 초록색·33만원, 남색·43만원)의 색상을 구분해 지급했다. 광주시는 지급과정에서 빠른 지급을 위해 색깔을 구분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득 수준이 노출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광주와 부산에서 금액별 차이를 둔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정부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하고 시정지시를 했다.

광주시는 즉각 금액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전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한 신규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카드가 발급되기까지는 3-4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고 사용한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명(지급 예정액은 약 2770억원)이며 전날까지 6만1998명에게 168억원의 카드가 발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

### 국정기획위서 필수 의료 확충 등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 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부과장, 안도걸 기획분과 위원, 이준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국제 과제 반영을 위한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 평 규모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광양만권 일대 기존 이차전지 투자산단과 미래첨단소재 국

가산단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 산단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대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서남권 일대에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고흥을 세계적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제2우주센터 구축사업'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